

Economy Brief

관세 서한, 관세 리스크 증폭보다 본격적 해소 시그널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트럼프 대통령, 8월 1일부터 한국과 일본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 발송

트럼프 행정부가 희망하는 상호관세 윤곽: 1) 주요 교역 파트너국가의 상호관세를 범위는 10~20% 수준, 2) 자동차 25% 등 일부 고율 관세 품목은 관세 협상에서 배제

7월은 상호관세 리스크가 확산되는 국면이 아닌 본격적인 해소 국면

관세 불확실성이 재차 불거졌지만 쇼크는 없을 듯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12개국 정상 앞으로 관세 서한을 발송 혹은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에 보내 관세 서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단일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25%의 단일 관세 적용을 통보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에 통보한 25% 관세율의 경우 한국은 지난 4월 9일 발표되었던 25% 관세율과 동일하지만 일본은 24%보다 1%p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의 관세 서한을 보냈다. 이들 국가들의 관세율은 보면 말레이시아는 기존 24%에서 25%로 소폭 상향 조정된 반면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로 동일했다. 그리고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관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번 관세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관세 불확실성을 다시 자극하는 이벤트가 되었다. 그러나 관세 서한을 통해 통보된 관세율 수준이 지난 4월초 관세율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지난 4월과 같은 관세 쇼크가 재연될 가능성을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4월 발표되었던 상호관세율보다 높은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 형식을 빌어 본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 알렸지만 결과적으로 협상 시간을 연장하는 모양이어서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 트레이드로 평가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국가인 EU, 멕시코, 캐나다, 인도 및 브라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 서한이 발송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12개국 중 7개국에 대해서만 관세 서한을 발송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관세 서한이 발송될 수 있지만 언급한 국가 중 일부는 관세협상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오는 9일까지 관세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4월 발표한 대EU 상호관세율은 20%다. 만약 영국과 베트남에 이어 EU와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면 관세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7월은 상호관세 리스크가 확산되는 국면이 아닌 본격적인 해소 국면

영국,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 내용과 이번 관세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희망하는 상호관세 틀은 어느정도 윤곽을 보였다.

첫째,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주요 교역 파트너국가의 상호관세율 범위는 10~20%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 상호관세율을 25%로 통보했지만 베트남의 상호관세율이 20%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교역 파트너국가의 최대 상호관세율 수준은 20%가 될 공산이 높다. 결국 한국의 경우 20% 수준에서 관세율 수준을 얼마나 하향 조정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둘째,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등 일부 품목은 관세 협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입장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인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 미국측이 관세율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미국과 가장 밀접한 동맹국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1%p 수준이지만 기존보다 상호관세율을 상향 조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측이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의 경우 본보기 차원에서 고율의 보복관세가 부과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BRICS) 국가들 중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으로 단기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EU와의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한이 연기되었다는 점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8월 1일까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 파트너국가와 끝판 협상을 통해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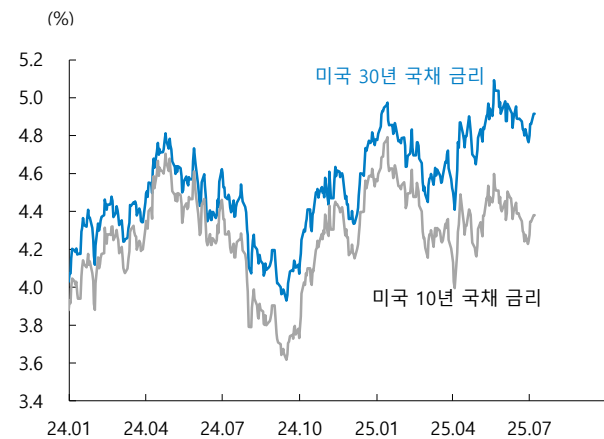
7월은 상호관세 리스크가 확산되는 국면이 아닌 본격적인 해소 국면이라는 판단된다.

그림1. 관세 불확실성으로 원화 강세 현상 주춤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관세 우려도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반등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님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